

일곱 개의 葛藤과 挑戰

黃 祯 奎

(서울大 教育學科)

세미나 概要 및 基調講演

1985년 5월 17일은 아마 한국 대학교육의 평가연구에 새로운 章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날로 지칭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학교육 평가사업의 연구와 실체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 시사하기 위해 모인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주제 발표 5명과 논평 및 토론자 25명의 친지한 논의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지향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뼈아픈 고통과 경험, 그리고 의지를 서로 확인하며 교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우리가 맞게 될 사회가 고도기술 정보사회이며, 이 시대의 특징으로 예견되는 정보산업, 유전공학, 메카트로닉스 산업, 생명공학, 자원에너지, 우주 및 해양개발, 컴퓨터 발달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정보량의 급증과 가속화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기조강연 趙完圭 교수)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이 같은 사회는 곧 인간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강요할 것이며, 사고방식, 가치체계의 재편성을 요구하며, 또한 國際化, 平等의식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대학교육에 대한 압력으로 등장할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궁정적 효과도 기대되지 만 동시에 부정적 효과도 간파할 수 없다. 궁정적으로 보면 생활공간과 질의 확대, 지식과 정보활용의 극대화, 인간의 복지와 평등의 실현 등이 가속화되리라 짐작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기계에의 의존성이 커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가치관이 만연되며, 인간소외의 현상이 가속화될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하는 대학의 評價의 哲學, 方向, 役割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 5개의 주제에서 논의되었다. “모든 사업이 그 업적에 대한 평가가 없이 발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대학의 교육도 그 주어진 기능에 부합하는가를 염격히 평가받음으로써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기조강연), “대학이 자칫 방치된 존재로 있을 때 프랑켄시타인과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한국의 대학처럼), 적절한 善意志와 키우려는 노력과 지원이 가미되면 천사도 될 수 있는 것이다”(張仁淑 사무총장)라는 것이 공통된 합의였다.

* 이 글은 본협의회가 주최한 “고도기술정보사회와 大學機能과 評價方向 세미나” 내용을 総合整理한 것임.

教授·學習活動의 效率화와 大學評價 방향

陳渭敎 교수는 주제 I “教授·學習의 效率화와 大學評價 方向”에서, 대학의 교수·학습에 관한 전문적 탐구가 결핍된 이유가 대학이 教授(instruction)보다는 研究(research)에 강조를 두는 풍토 때문이며, 매우 고학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한, 교수방법에 대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교수방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방법의 多樣化, 個別化수업의 강조, 教授工學 활용의 국대화를 제안하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학생인구 변화에 대한 예민한 판단력, 교수 자신의 교수방법 평가와 개선에 대한 의지가 함께 병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陳敎授는,

“공부하는 대학생과 연구하는 교수를 외쳐 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실험 대학이라는 이론으로 고등교육 개혁 활동을 추진한 시대도 가져 보았다. 실험은 이제 끝난 듯하며, 교수와 학생은 자기 연구와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제 나아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소망하고자 한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體制分析的 접근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全誠連 교수), 교수방법 평가는 年中 계속되고 피이드백 되어야 함을(金尚鎬 교수), 교수들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상존할 가능성이(김순희 교수), 너무 급격한 교수방법의 평가는 위험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음(장언호 교수)도 지적되었다.

研究活動 강화와 大學評價 방향

金炳昌 교수의 主題 II “研究活動 強化와 大學評價 方向”은 主題 I의 대학에서 연구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교수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대학이 수업에 치중되어 연구가 핵심적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업과 연구기능은 보완적이기 보

다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연구의 기능이 대학 안에 존재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公式的, 制度的 表現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지도, 수업시간의 置重, 외부자금에 의한 연구지원, 연구소 중심의 연구비 지원 등이 대학의 창의적 연구에 장애가 되며, 機關單位의 연구비 지원(institutional grant), 학회와 학회지의 지원 및 활성화, 연구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의 국제화가 선진국가에의 종속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내 문현의 참조를 연구에 따르는 倫理的義務로 요구해야 할도 겉들이고 있다.



▲ 張仁淑 사무총장의 개회사

“정신의 세계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는 것은 主觀性이다. 다만 이 주관성은 끊임없는 학문적, 도덕적 훈련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훈련된 주관성이다. 정신은 정신이 알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결과와 함께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창조적 연구의 정신이다.”

라는 그의 주장은 재음미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討論에서 연구를 위해서는 교수 스스로 만들어야 할 분위기와 남이 만들어 주어야 할 연구 분위기와 여전히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鄭在哲 교

수), 연구는 순수연구에 치중해야 하며(金宗西 교수), 연구를 위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함(민준기 교수), 협동연구나 공동연구를 위한 조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우종천 교수), '자유와 고독'이 연구자의 핵심이 지하나 제도적 도움과 보상 없이 현 대의 연구는 불가능하다(황성모 교수)고 지적하고 있다.

社會奉仕機能 강화와 大學評價 방향

車京守 교수는 주제Ⅲ "사회봉사 기능 강화와 대학평가 방향"에서 대학의 이념을 영국의 뉴만이 주장하는 인문주의 및 교양 중심의 대학과 미국의 클라크 커가 주장하는 연구와 봉사 중심의 멀티미디어 대학으로 구분하고 현대의 대학은 후자의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수나 연구의 기능으로부터 대학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대학의 봉사기능이라고 보면 대학은 마땅히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產學連繫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의 평가 방향은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과 관련된 항목의 선정, 이를 항목

을 計量化하기 위한 노력, 척도의 제작과 평가 방법의 고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학의 전통적 기능인 교육, 연구 등의 기능이 봉사의 기능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대학의 봉사기능에 대한 평가도 논의되어야 한다."

고 결론짓고 있다.

論評에서 사회봉사의 개념을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해 낸다는 소극적 개념을 초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과, 사회봉사에서 '지역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宋美燮 교수), 사회봉사가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지만 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그 이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金信一 교수)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봉사활동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치 기준이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논의(박수연 교수)도 있었으며, 사회가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분위기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고(이돈주 교수), 우리나라의 사회교육법 속에는 대학의 사회봉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운영실태는 극히 저조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 趙完圭 교수의 기조강연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황종선 교수)도 제기되었다.

行·財政運營의 합리화와 大學評價 방향

裴鍾根 교수는 주제Ⅳ “行·財政 운영의合理化와 大學評價의 方向”에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行政行爲의 합리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만족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行政組織의合理화는 그 속에 行政의

여 각도에서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全體制的評價를 강화해야 하며, 대학의 교육활동은 교육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많고 좋은 附加價值를 산출하기 위한 經營性評價에 강조를 두어야 하며, 타율적이기보다 대학 자체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自發的,自律的評價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학 평가는 대학의 目的一內容(교육프로그램) — 教育行·財政이 연결되는 目標指向의 면에서 전체적이며 그러면서 言語的評價가 아닌



▲ 주제Ⅳ “행·재정운영의 합리화와 대학평가 방향”

根據性, 業務性, 組織性, 融通性이 최대화될 때 가능하며, 行政行爲의 합리화는 의사결정의 合意性, 權力의 配分性, 人事의 公正性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합리화는 재정운영의 妥當性, 效率性, 公共性이 극 대화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教育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이 적절히 짜여지고 있느냐는 目標妥當性, 目標管理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行·財政 운영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명과 목적에 맞도록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행정 및 재정체계와 운영이 되었느냐의 目標指向評價를 강조해야 하며, 여

技術的評價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개개 대학의 自發的評價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 결론짓고 있다.

論評에서 대학행정이 조직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칫 조직과 사람을 분리시킬 위험이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또한 행정행위의 합리화를 위해 單獨執行部處를 合議制執行部處로 전환한다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능률성이나 합리화를 저해할 가능성성이 있으며, 대학 재정운영에서 公共性을 위한 公開性, 自律性, 實踐性의 문제는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 조건의 문제점이 있으며, 目標指向評價가 대학행정의

劃一化, 標準化를 초래할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金潤泰 교수). 주제의 논지에 논리적 체계의 혼란이 있는 듯하다(김종철 교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量的擴張'에 의해 평가, 가치화할 것이 있는 것과 동시에 대학에 따른 특수 목적에 관련된 특수 상황에 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김재범 교수) 지적도 있었고, 평가의 기준이 곧 목표이며, 이 목표의 具體化 없이는 공허한 평가가 되므로 각 대학에 따른 organization chart 가 필요하다(송자 교수)는 주장도 있었다.

教育與件 조성과 大學評價 방향

金信福 교수는 주제 V “教育與件 造成과 大學評價의 方向”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Herman Kahn, Daniel Bell, Alvin Toffler 등이 예측하는 낙관적 견해와 George Orwell, D.H. Meadows 등이 예측하는 비관적 견해를 비교하면서 낙관적 견해에 공감을 보이는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Bell의 예측에 의하면 미래 사회의 특징은 ① 산업구조가 第2次 산업에서 第3次 산업으로 이행하고 그 중에서도 교육, 연구, 보건, 행정 등의 분야가 두드러지게 발전한 것이며 ②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전문적 및 기술적 계층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비대한 것이며 ③ 과학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대학에서는 물론 기업에서도 R & D가 확충된 것이며 ④ 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강화된 것이며 ⑤ 지적 기술공업(intellectual technology)이 급격한 발전을 한 것이라 본다. Toffler의 예측에 의하면 ① 에너지의 再生 可能性이 커진 것이며 ② 식량개발이 획기적 성공을 거둔 것이며 ③ 컴퓨터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같은 미래사회에 대응해서 대학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가속화된 정보의 폭발과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살피어야 하며 이는 곧 轉移價 높은 지식의 전수,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인 기본교육의 강화, 학문영역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향하는 대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며, 각 대학이 학문영역별로 特殊性과 秀越性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기초연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연구용 시설과 인력의 보유, 학술 및 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집, 축적, 유통시키도록 도서관 기능을 혁파하고 전자계산센터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여건의 評價 방향은 무엇보다 적정기준 설정을 위한 목표체계 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教授의 量的 確保를 지시하는 타당성 있는 指標의 설정, 教授의 勤務負擔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의 설정, 가장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는 것이긴 하지만 教授의 質的 水準 평가지표, 외곽시설의 보유와 利用度를 用途別, 機能別로 평가하는 지표, 內部施設의 확보와 그 질, 재정 지원능력과 지출수준의 微視的인 시각에서 보는 평가지표 등이 연구되어야 할을 제안하고 있다.

論評(安文錫 교수)에서는 정부에 의한 대학 컴퓨터센터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연구 컴퓨터網(network)의 구축이 시급하고, 대학원 교육의 총실화와 연구인력의 최대한 활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여건의 평가에서는 計量的評價指標와 非計量的 質의 評價指標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기술혁신의 선도가 되려면 市場性은 특히 고려해야 한다(최청인 교수)는 주장과 함께 교육여건은 무어니 해도 재정 투자의 개선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대학 발전 방향의 이념이 불명료한 것도 대학평가의 큰 장애라는 지적(지웅업 교수)도 있었으며, 과거 점유면적 위주의 평가에서 시설 유지·관리평가 및 활용평가에로 전환되어야 한다(황지현 선생)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곱 개의 葛藤과 挑戰

이번 세미나를 시종 지켜보면서 느끼는 필자 나름의 해석은 주제발표나 논평 및 토론에서 한국 대학, 특히 고도기술정보사회에서의 대학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역할을 보는 認識에 갈등이 존재하며, 이것은 또한 한국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座標와 개념을 설정하고, 共感帶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挑戰의 문제로 파악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菊藤을 7개로 요약했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갈등과 도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첫째, 전통적으로 대학의 이념이요 기능이라고 인식되어 온 教育, 研究, 社會奉仕의 세 가지 역할 개념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칙론의 시각에서 보면 대학은 이 세 가지 이념과 역할을 잘 조화해야 한다는 것에 異論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세미나에 참가한 주제, 논평, 토론 속에는 한국의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이념과 역할에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고 있고 여타의 이념과 역할에 동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이 너무 가르치는 일(교육)에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대학이 교육보다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대학의 이념은 연구에 있어야 한다는 當爲性을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대학이 사회봉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正當性을 내세운다. 이것은 곧 한국의 대학이라는 실체를 놓고 관조하는 '되어야 할 대학상'과 '존재하는 대학상'에 대한 認識에 상당한 갈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곧 한국의 대학상을 정립하는 우리의 사고, 가치에 비켜 설 수 없는 중요한挑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둘째, 대학이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인 처음에는 능력 있고 조건(이 조건은 여러 가지이다)을 갖춘 경주분자를 대상으로 엘리트 교육을 치향하는 시기를 거쳐, 차츰 대학교육의 大衆化시대로 이행하고, 이어 普遍化시대로 전환되는 길을 걸고 있다.

본 세미나의 논의 속에는 아직 한국의 대학교육이 엘리트주의에 치중해야 하느냐 보편화의 추세가 요구하는 압력에 부응해야 하느냐의 갈등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視角의 차이는 대학교육의 질에 관련하여 秀越性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平等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이념적 갈등에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이 '70年代 및 '80年代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平等主義, 기회균등주의의 압력에 힘입어 고등교육 인구가 급작스럽게 폭창하면서 전체적으로 質의 저하, 質의 平均主義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대학교육이

전통적으로 치쳐야 했을 秀越性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 변수로 등장했다. 기회의 평등과 質의 秀越이 함께 종족되는 立方程式的 해법이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理想的이긴 하지만 量의 平等主義는 質의 平均主義 및 低下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어쩔 수 없는 수요, 공급의 방정식인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年代의 지구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대학교육의 秀越性 유지와 밀물처럼 닥치는 대학교육의 平等主義 사이의 葛藤을 어떻게 조화하며, 또 어느 쪽을 더 희생하여야 할 것인가의 適正 상태를 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 평가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는 한국 대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挑戰이라고 보여진다.

세계,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의 추출을 대학 교육—존재하는 사회, 경제발전, 고도기술 정보, 국가와 같은 外生的 變數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 그 자체가 갖는 본질적 가치, 본질적 의의, 본질적 이념인 內生的 變數에 미추어 도출되어야 하느냐의 시각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을 직감할 수 있다. 흔히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방향은 장

차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또 장차 이 같은 기술과 정보가 요구되니 그에 부응해서 그 요구에 맞도록 적응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이 언제나 그와 같은 外生的 變數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기보다, 대학교육 자체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이끌어 가면 그것은 곧 대학에도 적절할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도 유용하다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는 이 같은 시각의 차이 때문에 야기되는 갈등이 끊임에 보인다. 대학교육이 언제나 국가나 사회, 국제적 변화 등에 따라 종속적 지위에서 끌려다니면서 안 되며, 대학은 어디까지나 대학 자체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에 의해 정의되고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歸集의 回歸—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이 象牙塔 속에서 사회나 국가와 완전히 독립되어 생존하던 시대에는 전혀 야기되지 않았던 갈등이라면 현대와 같이 각종 기대와 요구가 荷重 높게 대학에 압력 변수로 작용하는 시대에서는 어차피 겪어야 되고 또 해결의 適正等式을 찾아야 할 문제로

▼ 종합정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네째, 대학교육이 현대사회, 또 미래의 고도 기술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데 따라 知識과 技術에 더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사고와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때 자칫 발생하기 쉬운 非人間化, 亂外 등의 인간문제 사이의 갈등이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장차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知識과 技術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곧 인간교육, 교양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곧 대학교육의 미인간화, 소외의 원천이 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또한 대학교육이 기술교육, 직업교육, 지식교육에 보다 치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폭넓은 기초교육, 인문교육, 교양교육, 인간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문제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같은 개념의 갈등은 대학교육 평가의 방향에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어느 쪽에 보다 평가의 가치 판단을 두느냐에 따라 대학 평가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이 어떤 標準이나 基準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個性과 自律性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느냐의 갈등이 존재한다. 대학교육을 평가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어차피 상정된 基準이나 標準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기준에 따라 대학교육을 평가 할 때 자연히 거기에는 剷一性, 他律性, 平均主義가 우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대학은 그 나름의 독특한 個性과 特性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개성은 오히려 算術的으로 계산된 標準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모든 대학을 어떤 표준에 비추어 표준화하려는 의도는 자칫하면 모든 대학을 剷一化, 規格化할 위험이 크며 더욱이 이는 他律과 依存의 만성적 질환에서 베어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와 같이 個性과 標準, 自律과 他律, 特性과 剷一을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키며, 또 어느 영역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인가는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에도 중대한 갈등의 요소이지만, 동시에 평가의 방향에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挑戰 문제로 보여진다.

여섯째, 대학의 評價라는 것을 어차피 객관적 으로 훈련된 합리성, 객관적으로 훈련된 주관성의 표현이라고 보고 이는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視角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대학교육의 ‘평가’라는 행위 자체가 대학의 프라이버시, 대학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자는 합리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신념하는 태도라면, 후자는 평가활동 자체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평가의 결과는 객관성의 이름을 빙 虚空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其實 모든 평가 활동에는 이 같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특히 ‘대학’, ‘대학인’, ‘대학 교수’라는 개념이 합축하는 집단의 성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외부의 간섭이 개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 같은 갈등은 더 심각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무슨 평가냐!”는 오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또한 모든 활동이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진지한 허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評價의 표현 방식에서 量과 質의 문제 사이에 개재하는 갈등을 읽을 수 있다. 평가의 결과는 대개 計量的이며 可視的인 것이 대부분이며,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나 표준에 비추어 본 비교나 대학단위나 하위단위 사이에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결과를 指標化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質的 특징, 非可視的인 것에 대한 해석이 보다 가치 있고 현실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量的 指標에 의해 표현되지 않는 質的解釋를 요구하는 평가의 대상이나 내용에 더 의미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計量的 指標評價와 예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두 개의 視角은 거의 모든 발표와 논의에서 지적되고 있고, 이것은 장차 대학의 평가 상황에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